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시각과 이해: 민간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 한 우**

I. 머리말

2005년 12월 쿠알라룸푸르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동아시아 지역통합 노력은 1997년 12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ASEAN 국가들과 한·중·일 간 첫 정상회의 이후 ASEAN+3 정상회의가 정례화된 이후 급진전되어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이른 것이다. 이는 그간 통합이 지체되어온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협력의 시도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시도는 일찍이 1990년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제안한 동아시아경제그룹(EAEG, East Asian Economic Group) 구상에서 찾을 수 있지만, 최근의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n Community) 논의는 1997년 후반 동아시아 경제위기로부터 시작되었다. 물론 세계적 지역화 추세와 함께, 1996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통합된 유럽에 대응하는 통합된 동아시아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도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한 몫 하였으나, 동아시아가 공통

* 이 논문은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KRF-2005-079-BS0031)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책임연구원 겸 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위원. asia@sogang.ac.kr.
논문심사과정에서 유익한 비평을 해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의 이해에 기반하고 있으며 하나의 단위체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구체적 인식은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로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제도화에 대한 직접적 요구는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금융기구뿐 아니라 동아시아를 포괄하는 경제협력기구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동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은 경제위기 시 역외로부터의 도움 없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동아시아 자체의 협력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으로 전개되었다.

그간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였고, 동아시아정상회의 개최까지의 과정에서 통합의 주도권을 쥐려는 각국 간의 경쟁, 특히 중국과 일본의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논자에 따라서는 동아시아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2005년을 “동아시아공동체 원년(元年)”이라고 평하기도 하고,¹⁾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 갈등이 현저히 표출됨으로써 “공동체 환상 버블 붕괴 원년”이라고 하기도 한다(夏剛 2006: 171).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있어 이제까지는 ASEAN이 주도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한·중·일 3국도 표면적으로는 ASEAN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북아 국가 특히 중국과 일본의 태도가 그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ASEAN이 운전석에 앉고 한·중·일 3국은 뒷좌석에서 운전을 잘 지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이를 잘 나타내준다(다니구치 마코토 2007: 6). 특히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동아시아 통합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양국의 시각과 이해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대한 각국 정부의 입장에 대하여는 국내

1) 동아시아정상회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논자는 “동아시아정상회의가 동아시아뿐 아니라 아시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되찾는 계기도 되고 아시아라는 일체감을 회복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檀彰 2006: 7).

에서도 여러 편의 연구논문이 있으나(김기석 2007; 김재철 2003; 김호섭 2006; 박사명 2006; 배공찬 2005 등), 민간의 다양한 시각에 대하여는 아직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민간 차원의 논의가 선택되고 집약되어 결국 정부의 정책으로 나타날 것인바, 민간 차원의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정부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 내에서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민간의 다양한 시각을 비교, 분석하고,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에 대한 민간의 논의들과 각국 정부의 입장을 대비하여 봄으로써, 각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선택의 폭과 그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는 향후 전개될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에서 상대방의 시각과 이해를 이해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립하는 데도 유용할 것이다. 이 논문은 동아시아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일본과 중국 간 상호경쟁의 과정을 탐색하고, 양국에서의 다양한 논의를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 및 필요성, 목표로 하는 공동체의 실체 및 실현 경로를 중심으로 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II. 동아시아공동체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경쟁

당초 2001년 “동아시아 비전그룹 보고서”, 2002년 “동아시아 스테디그룹 보고서” 등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를 중장기적 과제로 설정하여, 공동체 설립은 장기적 목표로 제시되었을 뿐이며 단기적으로 달성할 목표는 아니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12월에 동아시아정상회의가 열릴 정도로 지역협력의 제도화가 급속히 진전된 것은 중국과 일본 간의 지역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한 요인

2) 한국의 제안에 의해 1998년 제2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비전그룹’이 설치되었고, 2000년 제4차 회의에서 ‘동아시아 스테디그룹’이 설치되었다.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초반까지 양자 관계 중심의 외교전략을 수행해 오다가, 1990년대 후반 협력적 안보(cooperative security) 또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로 전환하여 다자 외교의 틀을 받아들인 이후, 지역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毛里和子 2005: 67). 근래에 중국이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적극적인 이유는,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안정적 국제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 그간의 경제성장으로 중국의 국력이 증대하여 이에 걸맞게 지구적 및 지역적 책임을 더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Zhang Xiaoming 2006: 80). 이런 점은 과거 일본이 경제력에 부합하는 국제적 역할을 강조하던 ‘보통국가론’과 상통하는 인식이다. 그러나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 역외 국가가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ASEAN+3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한다. 중국이 말레이시아와 결탁하여 2005년 12월에 동아시아정상회의를 서둘러 개최하려고 한 것도 이런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여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가, 한국과 중국의 적극성에 놀라 뒤늦게 적극성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공동체 형성에 참여하는 일본의 주요 이해는 동아시아의 공동번영과 동시에 지역 내 대 중국 견제에 있다고 하겠다. 일본은 미국과의 전통적 관계를 고려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이 지역에서 유지하는 한에서 협력체를 만들려는 의지를 보인다. 이에 따라 ASEAN 국가와 한·중·일이 참여하는 ASEAN+3 보다는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추가한 ASEAN+6 또는 그 이상 다른 국가들로 참여를 확대하는 공동체 형성을 선호한다.

동아시아공동체를 둘러싼 중국-일본 간 경쟁은 주룽지 총리가 2000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중국-ASEAN 정상회의에서 중

국-ASEAN 간 자유무역협정을 언급한 후 2001년 11월 제5차 중국-ASEAN 정상회의에서 공식 제안하면서부터 본격화된다.³⁾ 이 제안은 중국이 2001년 12월 WTO 가입함에 따라 이를 전후하여 외자와 시장 양 부문을 중국에게 빼앗기지 않을까하는 ASEAN 국가들의 우려에 대한 대응이었다.⁴⁾ 중국은 그 후 2002년 11월에 ASEAN과 ‘포괄적 경제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2010년까지 자유무역지대 구성을 약속하였고, 더불어 일부 품목의 조기 관세인하조치를 2004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국은 2003년 9월 ‘동아시아 싱크탱크 네트워크’ 제1차 회의를 북경에서 개최하여 공동체 형성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시도하였다(添谷芳秀 2006: 153-154, 159).

이에 대응하여 일본이 본격적으로 동아시아공동체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1월 고이즈미 총리가 싱가포르에서 일본-싱가포르 간 경제연대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⁵⁾을 맺으면서 동아시아에 “함께 걷고 함께 나아가는 커뮤니티”를 만들자고 제안한

3) 주룽지는 이밖에도, 중국-ASEAN 협력기금으로 500만 달러 증액, 다국간 협의를 거쳐 남중국해 문제 등 정치적 분야에서 협력강화, 메콩강 유역개발, 아시아 횡단철도 건설 등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하였다(松本はる香 2005: 44).

4)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ASEAN 국가들이 1989-94년간 아시아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되는 FDI의 40%를 받아들였으나 2000년에는 10%로 감소하였던 반면, 중국이 1998년 50%로부터 2000년 2/3를 차지함으로써 ASEAN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우려는 심화되었다(佐藤考一 2006b: 47-48).

5) 일본이 이제까지 개발도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주저한 것은 이 협정을 체결할 경우 개발도상국들은 농산물시장 개방에 일정의 유보기간을 가질 수 있는 반면 선진국인 일본은 GATT 제24조 관세철폐조항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농산물시장을 전면 개방하여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었다(佐藤考一 2006b: 49). 이것이 일본 정치인들에게는 국내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싱가포르와 첫 EPA를 체결한 것도 이러한 농산물시장 개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었다고 보인다. EPA는 재화 및 서비스 교역뿐 아니라 인적 이동, 투자 자유화, 지적재산권 보호, 정부조달, 금융 서비스 협력,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인재 육성 등 FTA보다 더 포괄적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을 규정한다. 일본이 FTA보다 EPA를 선호하는 것은 FTA에 의해 농산물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것이였다.⁶⁾ 이는 2001년 통산성이 발표한 ‘동아시아 비즈니스권 구상’의 연장선에서 ASEAN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나간다는 전략의 첫 시도였다.⁷⁾ 일본은 2003년 12월 일본-ASEAN 특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도쿄선언”에서도 ‘동아시아 커뮤니티’의 건설목표를 제시하였다.⁸⁾ 이 특별정상회의는 동아시아정상회의를 조기에 개최하지는 말레이시아의 요구를 중국이 받아들이는 데 작용하였다고 평가된다. 또한 중국이 2003년 9월 ‘동아시아 싱크탱크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한 것에 자극받아, 일본은 2004년 5월 산업계, 정부관료 및 학계 인사들로 ‘동아시아공동체평의회’[회장에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 의장에 이토 겐이치(伊藤憲一) 일본국제포럼 이사장]를 설립하였고, 이 평의회는 2005년 8월에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현상, 배경과 일본의 국가전략”이라는 정책보고서를 발표하였다.⁹⁾

양국은 2005년 12월 제1차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회원국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였으나, 결국 참가국을 한·중·일이 참여하는

-
- 6) 일본에서 일부 학자들은 처음 일본이 제시한 개념이 ‘동아시아 공동체’가 아니라 ‘동아시아 커뮤니티’라고 한 표현에 주목한다. ‘커뮤니티’라는 표현은 공동사회적인 ‘공동체’보다 포괄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9월 고이즈미 총리가 한 UN 연설에서였다(伊藤憲一·田中明彦 外 2005: 280-281). 한편 일부 학자들은 ‘커뮤니티’와 ‘공동체’를 구분 없이 사용한다(天兒慧 2006: 147; 進藤榮一 2007).
- 7) 이후 일본은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국가들과 경제연대협정을 위한 정부간 교섭을 계속하여, 2005년 9월, 2005년 12월, 2006년 9월 각각 협정을 체결하였다(김호섭 2006: 9).
- 8) 이 회의에서 일본은 ASEAN에 메콩개발협력(3년간 15억 달러 제공), 인재양성(3년간 4만명 교류, 15억 달러 이상 협력),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체결 의사 등을 표명하였다(谷口誠 2006: 308). 2003년 10월 고이즈미 총리는 ASEAN으로부터의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가입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중국과 인도가 이에 서명하자, 일본이 12월에 태도를 바꾸어 서명하였다.
- 9) 한국에서는 한국동남아연구소 회원을 주축으로 하는 학자들 중심의 비공식적 연구 모임인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중국에서는 정부기관인 외교학원이 동아시아공동체와 관련한 정책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양국은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황인원 교수와의 인터뷰).

ASEAN+3 이외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로 확대하게 되었다.¹⁰⁾ 중국은 다른 국가들이 회원국 확대에 대응하자 이후 러시아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고 미국, EU와도 협력관계를 확대하자고 주장하였다(毛里和子 2006: 6). 제9차 ASEAN+3 정상회의 및 제1차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각각 채택된 “쿠알라룸푸르선언”은 ASEAN을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핵심적 추진세력(the driving force)으로 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있어 ASEAN+3를 주된 추진체(the main vehicle) 동아시아정상회의를 중요한 역할(a significant role)을 하는 주체로 규정함으로써 모호한 타협을 이루었다(양자에 대한 비교는 黒柳米司 2006: 16). 일본의 동아시아정상회의 회원국 확대 시도와 중국의 대응은 동아시아정상회의를 APEC과 중첩되게 하고 단지 APEC과 같은 협의체에 불과한 기구가 되게 하여 실질적으로 형해화(形骸化)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Ⅲ. 일본 및 중국 내 동아시아공동체 논의

1.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일본에서의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민간의 논의는 세 가지 시각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동아시아공동체가 실현 가능하지만 미국과의 동맹관계의 기반에서 정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이

10) 일본은 제1차 동아시아정상회의에 호주와 뉴질랜드의 참여를 주장하였고 인도네시아가 이에 동조하였으며, 싱가포르를 인도의 참여를 제안하였다. 일본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미국, EU, UN까지 참가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진다(谷口誠 2006: 310).

기도 하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2005년 10월 발표되었는데, 8월 발표된 동아시아공동체평의회 정책보고서가 그 기반이 되었다. 그 의장인 이토 겐이치(伊藤憲一)와 다나카 아키히코(田中明彦) 등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伊藤憲一·田中明彦 外 2005). 이 논의의 출발점은 “일본이 지향하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미국이 동아시아에 관여하고 일미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기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동아시아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미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미국과의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하며 이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동아시아 협력을 추구한다는 전략이다.

기쿠치 쓰도무(菊池努 2005)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이 지속되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동아시아 경제가 중국의 성장으로 무역면에서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었지만 여전히 미국 시장 의존적이라는 점에서 자기완결적 경제권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종래의 구조가 잔존하고 있다고 본다. 그는 또한 미국이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등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싱가포르, 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어 중국의 대두가 이 지역의 안전보장의 기본적 구도를 바꾸지 않았다고 한다(43-45).

동남아 연구자인 시라이시 다카시(白石隆 2006)도 미일동맹 강화와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UN 문제 등 미일 간 국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에 주목하고, 대두하는 중국에 대하여는 미일동맹 강화로 억제하고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으로 개입하면서, 또한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하고 동시에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에 의해 일본의 행동반경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한다(119-120). 또한 이제까지 동아시아 안전보장체제는 미국을 핵(hub)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미국이 안보 이외 분야, 예로써 에너지 협력, 동북아 신뢰양성 및 예방외교, 동중국해의 국제적 행동규범 등에서 협이 될 수 있다면 중국에 개입할 수 있을 것이며, 중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할 때 비용을 높임으로써 중국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한다(127).

일본 동아시아공동체평의회 위원인 다나카 히로시(田中均 2005)는 동아시아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를, 글로벌리제이션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지역주의가 불가결하다는 것, 지역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하여 다국간 협력들이 필요하다는 것, 미국, 중국, 북한에 대해 분노에 찬 일본 내 불건전한 내셔널리즘을 건설적 방향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든다. 그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논하며, 일본의 미국 일변도 대외정책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니구치 마코토(2007; 谷口誠 2004, 2006)는 그간 일본의 모든 정책이 일미 간 안보관계에 토대를 두고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고, 세계적 지역주의의 급변하는 국제환경에서 일본이 동아시아 국가들과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한다. 일본은 그간 미국 중심의 외교만을 중시하였고, 실질적으로 아시아 외교는 등한시하였다고 본다. 일본의 아시아 외교는 강한 대미 의존과 미국 배려, 중국에 대한 강한 대항의식과 반중감정에 지배되고 있어 냉정함과 균형을 결여하고 있다고 한다(谷口誠 2006: 307). 그는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미국 일변도의 외교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이며, 중국의 부상에 대하여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여야 하고,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일미동맹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축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는 동아시아경제공동체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협력가능한 분야로 문화교류 및 젊은 세대 교류, 환경 분야, 에너지 분야, 농업분야, 금융

협력분야를 들고 있다.

아마코 사토시(天兒慧 2006) 또한 “중국은 적으로 취급하면 적이 된다”는 조셉 나이(Joseph Nye)의 말을 빌어 중국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요청하고 있다(23). 중국의 부상으로 아시아의 세력균형이 변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며, 현실에 기반하여 일본의 외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일본이 그간 장기적 외교전략 없이 대중요법적으로 대응해오고 동북아 국가들과 불협화음을 냄으로써 아시아에서 일본의 존재감이 하락하게 되었는데, 아시아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지속시키는 것이 미국의 대일본 중시정책을 지속하는 관건이라고 본다. 또한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의 존재감으로 인해 중국과 직접 교섭할 수도 있으며, 미국이 1972년 일본과의 협의 없이 중국에 접근한 점, 2005년 일본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를 최종적으로는 동조하지 않은 점 등에서 보듯이 미국이 일본의 이익에 부합하게 항상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169-170). 사실 그간 미국과 중국 양국간 협력관계가 증대되었으므로, 아시아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중국과 직접 대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101-102, 173-174). 더불어 중국이 미국에 적대관계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국력을 증대시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라이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에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대라고 인식케 하는 데 있다고 한다. 즉 중국과의 대화가 불가결하다는 인식을 미국이 갖게 하는 객관적 존재감을 중국이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189-190). 따라서 미국 의존적 일본의 대외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¹¹⁾

11) 동아시아공동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중국과 미국과의 접근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아오키 나오토(青木直人 2005)는 부시 정권이 9.11 테러 이후 중국과의 대

셋째, 동아시아공동체는 허상이나, 한정적 목표에는 도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반대론자들은 동아시아공동체가 결국은 패권대국화하는 중국으로 인해 일본의 국익과 민족의 독자성을 상실하게 할 것이라는 것과 이 구상이 미국을 배제하는 것이라는 경계심을 갖고 있다. 또한 ASEAN+3와 APEC이 존재하는데 왜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반문한다(瀧田賢治 2006: 25). 저널리스트 아오키 나오토(青木直人 2005)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 중국과 한반도의 위협을 무시한 환상에 불과하며, 우호라는 미명하에 구축된 정계, 재계 및 친중국과 관료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장치이며 일본인의 정당한 내셔널리즘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74).¹²⁾ 그는 주변국을 껄뽀하다고 보는 일본 내 불건전한 내셔널리즘이 충만하다고 본 다나카 히로시(田中均)의 주장에 대하여, 그것은 껄뽀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국민감정의 발로라고 비판한다.¹³⁾ 그는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했을 뿐 아니라 핵과 미사일로 일본을 위협하고 있어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북한을 껄뽀하게 생각할 것이며, 중국은 세계 제1의 원조국인 일본¹⁴⁾에 대하여 국내에 소개하지도 않으면서 역사문제로 반일외교를 펴고 반일 민족주의를 조장하고 영해를 침범하는 등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일본인들이 중국을 껄뽀하다고 여긴다고 하여 이를 불건전한 내셔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고 반문한다(72-73).

결노선을 수정하여 중국을 지역안보에 포함시키려 하고, 북한의 핵문제를 처리하는 6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을 중시하는 점에 주목하여 미중 재접근을 자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80).

- 12) 그는 중국과의 경제적 이해로 중국에 유화적인 기업인들을 “국가관이 없는 2류 경제인”이라고 한 후쿠다(福田和也)의 용어를 빌어 혹평한다(青木直人 2005: 77).
- 13) 그는 다나카 히로시(田中均)가 북한에 납치됐다 귀국한 5명의 일본인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발언하여 파문을 일으킨 인물이라고 혹평하였다(青木直人 2005: 71-72).
- 14) 일본의 중국에 대한 ODA 공여는 지난 25년간 6조엔을 돌파하였으며, 현재 중국정부가 외국정부로부터 차입하는 공적 지원의 절반 이상을 점하고 있다(青木直人 2005: 76-77).

와타나베 도시오(渡辺利夫 2006b)는 1985-2003년간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에서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라거나 2003년 역내 교역비율이 55%에 이른 점으로 보아 “동아시아는 동아시아[지역]화되었다”고 보며, 이러한 지역통합이 제도적 틀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여 자생적으로 실행되는 것으로, 이런 의미에서라면 동아시아는 사실상 통합체라고 한다(214-216). 그러나 공동체라고 하면,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공동체로 진화되는 과정에서 적어도 공동시장의 수준에는 이르러야 하는데, 동아시아에서는 관세동맹에도 이르지 못할 것이고 게다가 공유하는 가치도 없기에 공동체 형성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그는 공통의 가치가 없는 현상의 예로 중국과 한국의 반일본 정서를 든다. 중국과 한국의 민족주의적 반일본 정서가 상호협력력을 가로막고 있어 공동체로 발전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¹⁵⁾ 더욱이 중국이 동아시아공동체를 추구하는 배후요인이 일본을 동아시아 공동체로 끌어들이 미국과 일본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려는 의도에 있으므로 대국화하는 중국에 대항하여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미일동맹이라고 파악한다(渡辺利夫 2005: 223). 단지 가능한 지역협력체는 현재 깊이 연계되어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자유무역협정 수준이며 그 이상의 공동체 형성은 불가능하다고 본다(渡辺利

15) 와타나베 도시오(渡辺利夫 2005)는 한국과 중국은 약속을 깨고 역사문제를 들추어 반일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이즈미(小泉)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제2차 세계대전시 군위안부 존재 부정 등 일본의 ‘반(反)동아시아화’를 감추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좌파 지도자들이 ‘용공적’ 김대중 정권하에서 강고해지고 노무현 정권하에서 ‘이스태블리쉬먼트’(establishment)가 된 것은 그들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며, 한국의 국민의식은 친북(親北), 반미(反美)로 크게 기울어 ‘한국의 북조선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44-46). 그는 중국이 시장경제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사회가 복잡하게 됨에 따라, 사회의 불만을 대외적으로 표출하게끔 하여 해소하고 구심력을 만들기 위하여 반일(反日)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49-50).

夫 2006b: 218-219). 또한 동아시아에서 그나마 제도화된 지역협력 조직이 ASEAN인데, ASEAN은 설립조약도 없었기에 동아시아는 통합을 위한 제도적 틀이 없는 셈이라고 지적한다(215). 따라서 동아시아공동체는 ‘누에’(鵜: ぬえ)¹⁶⁾라는 기형의 괴물이어서, 일본은 이를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渡辺利夫 2006b: 223).

구리야마 다카카즈(栗本尚一 2006)도 또한 동아시아에서 공통의 가치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의 구축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 주요 모순은 일본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반하여 중국은 사회주의 일당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하타케야마 노보루(はたけ山 襄 2005)도 중국의 현 정치체제를 전제로 한다면 동아시아공동체는 불가능하며 자유무역지대 정도가 실현가능하다고 본다(154). 그것은 동아시아공동체의 설립목적이 이 지역에서 다시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미사일 공동관리가 가장 유효할 텐데 이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동아시아공동체는 그 목표와 내용이 일치할 수 없어서 실현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156). 더불어 공동체를 형성하려면 일정한 주권 양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동아시아비전그룹 보고서에도 주권양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고, ASEAN 국가들도 이구동성으로 주권양도는 없다고 하는 것도 공동체 형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며, 단지 ‘APEC community’처럼 ‘공동체’(community)가 수사학적 용어로서 가능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157). 또한 공동체가 형성되려면 EU와 같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존중, 법의 지배라는 가치관을 공유하여야 하는데 현재 중국이 이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므로 실현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그는 현재 ASEAN+3 13개국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동일 구성국이기엔 의미가 없으며, 국가가 아닌 관세지역

16) 이 괴물은 원숭이 머리, 뱀 꼬리, 호랑이 팔다리, 너구리 몸에 호랑이지빠귀 소리를 내는 전설상의 동물이다.

자격이지만 WTO 정식회원국인 대만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159). 따라서 이 지역에서 가능한 조직은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라는 것이다.

가토 료(加藤朗 2006)는 동아시아가 안보적 측면에서 국가 주체 수준에서는 핵 카드를 이용한 패권투쟁의 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패권투쟁이 완화되거나 해소되지 않는 한 안전보장공동체로서 동아시아공동체는 제도화될 수 없으며, 단지 실현가능한 것은 비국가주체를 포함한 다주체간 협력에 의한 비전통적 안전보장공동체라고 본다(121).

중국에서는 대체로 공동체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공동체가 중국이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는 장이 된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공동체 형성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논자는 찾기 어렵다. 이는 대부분 논자들이 관변학자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 일본학자가 지적하듯이, 중국의 논자들이 모두 중앙의 명령에 따르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정상 수준부터 학자를 포함한 민간 수준까지 관련 문제를 논할 때는 전략적인 방향성이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낸다(添谷芳秀 2006: 156).

2. 공동체의 실체와 실현 경로

(1) 목표로서의 공동체의 실체

일본에서 동아시아공동체 모델로는 일반적으로 유럽연합을 상정하고 있는 논자들이 다수다. 이는 각국의 주권을 어느 정도 양도하여 단일한 실체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특징을 들어,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 가능성을 부정한다. 공동체 반대론자들은 동아시아에서 가능한 통합의 수준으로 자유무역지대 정도로 본다(渡辺利夫 2006b; はたけ山 襄 2005).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가 실현가능하다고 보는 논자들은 오히려 동아시아와 유럽의 차이를 들고, 동아시아의 현상에 기반하여 제도적 통합보다는 기능적 통합을 우선 추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 동아시아공동체평의회의 주도 인사들인 이토 겐이치, 다나카 아키히토 등(伊藤憲一·田中明彦 外 2005)은 동아시아공동체가 유럽의 모델을 따라 형성될 수 없다고 본다. 아마코 사토시(天兒慧 2006)도 동아시아 지역이 지역협력의 제도화라는 점에서 그 수준이 낮고, 국가규모, 경제발전단계, 정치체제, 사회문화생활, 가치관, 민족, 종교 등에서 커다란 다양성이 존재하며, 경제에 편중된 지역협력이 진전되고 있고, 국민국가의 틀을 전제로 지역통합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유럽의 상황과 다르다고 한다(137-138). 다키타 겐지(瀧田賢治 2006)도 몇 단계를 거쳐 공동체에 이르는 EU 모델은 유럽적 현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 동아시아공동체 모델이 될 수 없다고 본다(27).

일본의 논자들이 공동체의 실체에 대해 상이한 견해를 피력하지만, 공동체가 추구하여야 할 보편적 가치로, 민주주의, 자유, 인권, 법의 지배, WTO 등의 글로벌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는 듯하다(西口清勝 2006: 8-9). 이는 일본 정부가 안전보장, 번영을 목표로 하여, 자유 경제의 발전, 자유,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부전(不戰)공동체를 추구한다는 입장과 상통하는 것이며, 아직 이를 실현하고 있지 않은 중국에 대한 경계의 잣대로 이용되기도 한다.

중국의 논자들은 향후 형성될 동아시아공동체를 느슨한 회의체로 상정하는 경향이다. 중국이 ASEAN 방식(ASEAN Way)을 주장하는 것은 이 방식이 기능적 협력을 통한 지역적 화해를 실현하여 동아시아에서 지역주의의 선구자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이나(Zhang Yunling 2005: 60), 실제로는 ASEAN 방식이 자국의 주권을 제약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 ASEAN

방식은 공동체의 운영을 내정불간섭 원칙과 전원 합의를 통한 의사 결정 등을 특징으로 하여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중국 학자는 유럽연합이 국가 중심의 지역적 보호주의의 수단이었으나, 동아시아의 신 지역주의는 국가 이외 다원화된 행위자와 다차원적으로 수행되고 외향적이어서 초지역적 특성을 가지며, 또한 경제발전수준, 정치체제, 문화, 종교 등에서 격차가 많은 국가들을 포함하는 포괄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주장한다(Su Hao 2005: 42-43). 좀 더 구체적으로는 왕이(王毅 2005)가 지적하는 것처럼,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ASEAN+3, 세 개의 ASEAN+1 및 한·중·일 정상회의뿐 아니라, 지역내 하부의 협력 메커니즘을 장려하고 이들을 종합한 협력체를 추구하고자 한다(7; 北京外國問題研究會. 2006).

(2) 회원국 범위

공동체 회원국 범위와 관련하여 일본이나 중국에서 대부분 논자들은 동아시아공동체가 배타적이기보다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들은 지리적으로 동아시아에 위치해 있지 않지만 동아시아에 깊이 관여되어 있어 동아시아의 문제에 미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며, 일부 논자들은 미국은 이미 동아시아의 일부라고 하기도 한다.

일본의 한 논자는 이미 동아시아에 ASEAN+3 범위를 넘어 지역협력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예를 들자면, 아시아 해적대책 지역협력협정에는 ASEAN+3 외에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가 참여하고 있고, 인신매매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발리 프로세스에 약 40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와 호주가 주도적 역할을 하며,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테러대책 장관회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아시아채권기금(ABF)에는 ASEAN5+3+호주, 뉴질랜드, 홍콩 등

이 참여한다. 따라서 동아시아공동체 회원국 범위는 지리적 한계를 둘 것이 아니라 기능적 협력을 축적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西宮伸一 2006: 199-200).

중국의 논자들도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존재를 인정하며 이를 의식하여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나, 역외 국가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주저한다. 그것은 지역공동체의 핵심이 배타적 집단 아이덴티티의 확립에 있으므로 경제나 안보 등 영역에서 포용적이고 비배타적인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鄭先武 2007: 56). 장원링(張蘊嶺 2003)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미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미국의 존재가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미국과 동아시아와의 관계는, 미국이 EU에 포함되지 않지만 관련을 맺고 있고 NATO를 통하여 연관되어 있듯이,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련된다는 것이다(天兒慧 2006: 135-136에서 재인용). 그러나 일본의 논자들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안전보장 문제에 대처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안보기구가 아닌 ASEAN이 주도하는 동아시아공동체가 이를 다루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한다(西宮伸一 2006: 201-202).

또한 중국의 일부 논자들은 북한을 동아시아공동체에 포함하여 10+4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나(金熙德 2006a: 59), 대만을 회원국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Zhang Yunling 2005: 59). 그것은 대만이 독립국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표방하는 중국의 이해의 결과다. 이에 대해 일본의 일부 학자들은 실제하는 ‘국가’인 대만을 제외할 경우 불완전한 지역기구가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栗本尙一 2006: 159). 더불어, 중국의 일부 논자들은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성국으로 ‘ASEAN+3’보다는 ‘10+3’라고 지칭하여 ASEAN을 하나의 단위로 보지 않고 개별 국가의 집합으로 보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Zhang Yunling 2005: 57-58; 金

熙德 2006a: 58-59; 劉昌黎 2007: 56).

(3) 실현 경로

한 논자가 지적하듯이 동아시아공동체가 경제통합을 기초로 하여 문화적, 외교적 일체화로 진행된다고 하나, 그 구상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실현에 이르는 경로는 현재까지 불명확하다(青木直人 2005: 70).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EU와 같은 공동체를 목표로 삼는 논자들은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의 단계를 차례로 올라가 공동체에 이르게 되리라고 본다. 현재 동아시아의 통합의 정도는 경제협력에서 가장 현저하므로, 경제적 통합 노력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는 데 대부분 동의한다. 그 근거로 동아시아 역내 수출은 1980년 33.9%에서 2003년 50.5%로 증가하였고, 수입은 같은 기간에 34.8%에서 59.7%로 증가하였다(白石隆 2006: 120).¹⁷⁾ 이 수치는 2003년에 NAFTA의 수출, 수입이 각각 55.4%, 39.9%였고 EU가 각각 61.4%, 63.5%여서, 동아시아의 역내 교역이 EU에 근접하고 있는 정도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많은 논자들은 일반적으로 동아시아가 유럽에 비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다양하고,¹⁸⁾ EU의 모태는 독일과 프랑스의 적극적인 화해에 기반하였으므로, EU 모델이 동아시아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본다.

기쿠치 쓰도무(菊池努 2005)는 FTA 확대 등 기능적 협력이 자동적

17) 시라이시 다카시는 동아시아의 범위에 어느 국가를 포함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하지 않았으나, 그가 제시한 수치는 와타나베 도시오가 제시한 ASEAN+3의 역내 교역비율 55%에 근사한 수치다(渡辺利夫 2006b: 214).

18) 경제부문에서 격차를 예로 들면, 2003년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민총소득(GNI) 중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 61.5%, 중국 및 홍콩 22.3%, 한국 9.5%, ASEAN 선진 5개국 8.1%였으며, ASEAN 내에서 선진 5개국은 전 10개국 GNI의 90%를 차지하였다(吉野文雄 2005: 102-104).

으로 공동체 형성을 가져오지는 않으며 구속력 있는 행동규칙과 이를 이행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즉 단기적 경제적 이익이 중요하지만 공동체 형성에서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지역협력의 기본원리, 규칙을 만드는 등 제도화, 거버넌스의 문제라고 지적한다(54). 니시미야 신이치(西宮伸一 2006)도 FTA와 공동체 형성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한다. 예로써 일본이 호주를 ASEAN+3에 참가시키고자 하나 농산물 문제로 인하여 양국 간 FTA를 체결하고자 하지 않는 것에서 보듯이 FTA와 커뮤니티 형성과는 관련이 깊지 않다고 본다. 그는 이 보다는 오히려 북한 관련 6자회담을 발전시켜 동북아 커뮤니티를 만들고 ASEAN과 병렬시키는 형태로 동아시아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205-208). 가토 로(加藤朗 2006)는 동북아 국가보다 ASEAN에서 안전보장의 제도화가 더 진전되었으므로, 국가 및 비국가주체를 포함한 다주체 간의 다원적 안전보장을 통하여 비전통적 분야에서 안전보장 공동체를 만들고 이를 동북아에까지 확대하면 동아시아공동체가 탄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130-131). 외교관인 고히라 마사히로(小原雅博 2007)는 공동체 형성의 로드맵으로, 1) 사람, 물건, 자본, 정보를 통한 지역 내 경제통합의 달성, 2) 국경을 넘는 문제에 대한 지역협력의 제도화, 3) 공동체의식의 양성을 들었다(68).

아시아적 또는 ASEAN적 방식이 필요하며, 할 수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하는 ‘패치워크’(patchwork)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실무적, 실제적 분야(low politics)에서 현실적 국제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를 이해서는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나 시민사회 간의 협력과 제휴가 불가결하며 이로써 국제협력 레짐을 형성하는 방법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본다(瀧田賢治 2006: 27-28).

중국의 논자들도 경제협력의 강화를 통하여 동아시아공동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며, 동아시아 안보체제 구축을 통한

공동체 구상도 병렬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안보측면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에 접근하는 논의는 일본에서 희소한 데 비하여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이다.

원홍화(門洪華 2004)는 주변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국의 지정학적 전략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전제하고, 중국은 경제협력의 주도적 위치를 확립하고, 경제협력에 의해 동아시아 일체화를 추진한다고 하여 동아시아 통합에 있어 경제우선적 관점을 보인다. 루안쥙쩌(阮宗澤 2003) 또한 중국이 동아시아에 제공하는 시장 규모는 일본을 넘으며 이로써 중국과 주변국 간에는 하나로 발전하며 이를 반영하는 운명공동체를 형성해갈 것이라고 하여, 경제적 협력관계를 통한 동아시아 일체화를 제시한다(天兒慧 2006: 150에서 재인용). 외교부차관 왕이(王毅 2004)도 동아시아는 사회문화적으로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므로 함께 관심을 가지는 경제협력으로부터 시작하여 안보대화화 협력을 전개하여 동아시아공동체로 향한다고 본다. 그러나, 한 논자는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체 형성과정에서 경제를 강조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정치적 요소를 축소시켜, 정치적 협력 없이는 진정한 공동체 형성이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하기도 한다(鄭先武 2007: 58).

중국의 논자들은 경제적으로는 ASEAN과 한·중·일 간 FTA 및 안보협력에 있어서는 상해협력기구와 6자회담을 발전시켜 동아시아 안보기구로 만들자는 방안을 제시한다. 예로써, 장원링(Zhang Yunling 2005)은 동아시아에서 형성되어가고 있는 여러 FTA를 합하여 EAFTA를 만들고, 10+3 대화 프레임워크를 동아시아정상회의, 나아가서 동아시아 기구(Organization)로 발전시켜가자고 한다(58). 진시더(金熙德 2006b)는 동아시아가 냉전구조가 잔존한 세계유일의 지역이며 지역협력이 가장 지체된 지역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고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제협력은 10+3 프레임

워, 안보협력은 6자회담이 유효한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한다(58-60). 10+3에는 안보상 중요 국가인 미국, 러시아, 북한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 독자적으로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6자회담을 상설화하고 확대하여 동아시아 안보기구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ASEAN의 확대에 의해 6자회담을 포괄하는 형태가 아니라 6자회담의 틀을 ASEAN으로 확대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또한 다자간 지역협력을 통하여 동북아 국가, 특히 중일 간 해소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에 더 쉬울 것이라고 본다(金熙德 2006a: 57).

안보적 측면에서 평자오쿠이(馮昭奎 2004)는 일본이 미국과의 2국간 동맹관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동아시아 각국과 공동으로 제3자를 표적으로 하지 않는 비군사동맹적 다국간 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가는 안보면에서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축할 성의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시금석이라고 하며, 한반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집단안전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연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6자회담을 정기화시키고 ASEAN 지역 포럼(ARF)과 6자회담을 장래 동아시아공동체의 중요한 기반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松本はる香 2005: 45-46에서 재인용).

IV. 양국 논의의 비교

대체로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민간의 논의에 있어 일본의 논자들은 동아시아공동체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에서부터 논쟁적이나, 중국의 논자들은 공동체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자체에 대하여는 기정사실화하고 실현경로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는 경향이다. 또한 일본의 논자들은 경제공동체 논의에 집중하는 반면, 중국의 논자들

은 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또는 병렬적으로 안보공동체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양국 논자들 간의 견해 차이를 비교하고 그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목표로 하는 공동체의 실체와 경로에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 논자들은 동아시아공동체의 실현가능성을 주장하는 논자부터 이에 반대하고 현재의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논자까지 긴 스펙트럼을 나타내며, 정부는 공식적으로 목표로 하는 공동체의 실체에 대하여는 분명히 제시하지 않으며 공동체의 실체를 긴밀한 경제협력체제, 자유와 인권, 법의 지배, 민주주의의 및 자유시장의 가치를 공유하는 부전(不戰)공동체로 표현한다. 일부 논자들은 동아시아공동체의 모델로 유럽연합을 상정하고 논의를 전개하는 경향이며, 경제협력의 강화를 통하여 기능적으로 통합을 이루어 공동체에 도달한다는 경로를 제시하지만, 유럽과 같은 경로를 통하여 공동체에 도달하리라고 보지 않는 논자도 많다.

중국에서 많은 논자들은 동아시아 지역공동체가 유럽과 같은 단일한 실체가 아닌 복수의 실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유럽과 동아시아의 공동체 형성이 동일한 길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龐中英 2003: 8). 일부 논자는 경제협력을 우선하여 점진적으로 지역협력의 제도를 추구한다는 기능적 접근을 주장하나, 일부 논자는 상해협력기구, 6자회담 등 다양한 안보협력기구를 발전시키자는 제안을 하고 이들을 포괄하는 제도화 시도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왕이(王毅)가 언급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공동체의 의미를 급히 정할 필요 없이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어 착실히 공동체로 발전시켜간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天兒慧 2006: 150에서 재인용), 2005년 제1차 동아시아정상회의 개최를 재촉한 것처럼 동아시아공동체로의 제도화를 신속히 추구하고자 한다. 한편 중국의 논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일부 논자들은 단순히 경제협력을 증대시키는 등의

기능적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체를 형성해가기보다는 공동의 가치, 공공지(公共知) 등 ‘지역의식’의 형성이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佐佐木毅 2003; 金熙德 2006a: 58).

따라서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적 접근에 한정하고 공동의 가치 및 제도적 틀 형성을 장기적 과제로 두는 일본의 많은 논자들과 달리, 중국의 논자들은 양자를 동시에 추구해 가는 것이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앞당기는 길로 보고 있다.

둘째, 공동체의 목표가 되는 실체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결여된 상황에서, 장래 힘의 균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구성원의 범위에 있다. 회원국 문제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중국과 일본 모두에게 가장 핵심이다. 중국은 미국에 의한 세계적 패권을 제어하고자 하며, 동시에 일본은 중국의 지역적 영향력 확대에 극히 민감하다. 이와 관련하여 쟁점이 된 것이 동아시아정상회의 참가국의 범위였다.

동아시아공동체에 참여하는 국가들 모두 개방적 지역주의에 동의하면서도, ‘개방적’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이를 미국 및 동아시아 주변국을 회원국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중국은 회원국 자체는 지리적으로 동아시아에 속하는 ASEAN+3 국가들로 한정하고 역외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이러한 전략은 2005년 제1차 동아시아정상회의에 ASEAN+3 이외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함으로써 무산되었고,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를 회원국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일본의 일부 논자들은 대만을 동아시아공동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나, 중국 논자들은 이에 적극 반대하며, 일부는 동북아 5개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여 몽골과 북한을 회원국으로 고려하는 입장을 보인다.

일본의 지역질서관은 기본적으로 냉전시대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경향이며, 중국의 적극성에 대응하여 ‘전술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미국을 여전히 동아시아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라고 인식하고자 하며, 지역기구에 미국을 참여시키고자 한다. 중국에 대하여는 일본 내 논자들이 여전히 우호적 또는 대립적으로 상반된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일본에서 공동체 찬성론자들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맞대응할 수 있으나 사실 벽차기 때문에 중국을 일정한 규율로 묶어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양국간 관계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중국을 다자적 틀 속에 들어오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田中均 2005). 이에 반해 일본의 반대론자들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중국을 한 가치관을 공유하여야 하는 공동체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셋째, 주로 기반하고 있는 국제정치관에 차이가 있다. 그것은 질서형성자와 질서유지자 간의 이해의 갈등에 따라 각기 현실주의, 자유주의와 사회구성주의 가운데 선택적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⁹⁾

중국은 미국 1국 주도의 세계전략에 대응하는 전략상 현실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면서도, 지역화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는 자유주의적 시각을 갖기도 하고, 지역주의를 사회구성주의 시각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Zhang Xiaoming 2006: 81).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동아시아라는 이미지, 정체성 등 지역의식을 형성함으로써 지역내 국가간 이해의 정도를 높여 갈등의 가능성과 비용을 낮추자는 것이다. 구성주의적 입장은 동아시아 지역의 귀속적 정체성이 적어 기능적 정체성이 주요한 것이라는 평가에서도 드러난다(劉興華 2004: 22; 牛海彬 2005: 1). 수하오(Su Hao 2005)도 지리

19) 지역통합을 보는 세 시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박사명(2006: 374-378),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최영중(2005) 참조.

적 근접성, 본래적인 문화적 연계, 경제적 연계 등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역을 자연적 또는 본래적 지역이라고 하며, 이와 달리 넓은 의미에서 지역통합은 지역 내 국가나 개인, 단체 등에 의해 의식적으로 조정, 협력, 융합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지역 개념 구성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한다(39-41).

이러한 현상은 부상하는 중국이 동아시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의도와 맞물려 있으나, 일본은 기존의 질서를 지속시키려는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한 논자는 일본이 냉전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劉昌黎 2007: 60). 이에 따라 중국의 한 논자는 일본이 중국과의 경쟁을 위하여 미국 및 우방국을 끌어들이려는 세력균형적 사고와 경제 우선을 통하여 일본의 선도적 지위를 나타내려는 것은 “평화적 연막”이며, 진정한 지역공동체를 건설하려면 경쟁적 권력정치를 넘어 상호이해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鄭先武 2007: 59-60).

일본은 이에 반해 현실주의적 시각에 기반한 논자들이 다수며, 자유주의적 시각을 취하기도 한다.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에서의 힘의 균형이 깨지고, 미국과 협력하지 않을 경우 중국 우위의 지역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본다. 물론 중국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미국과의 동맹에 기반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주장과 미국 일변도의 대외정책에서 탈피하여 균형적이고 장기적인 대 아시아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교차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동아시아 공통의 법(法) 문화를 형성하자는 주장(江橋崇 2006), 대중문화 교류가 공통의 의식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青木保 2005a, 2005b) 등 구성주의적 시각을 보이는 논자도 있으나, 소수이며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V. 맺음말

중국과 일본의 논의에서 보듯이, 목표로 하는 동아시아공동체의 실체가 무엇인가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공동체 형성에 대하여 일본의 논자들은 회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도 적지 않으며, 공동체 형성을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경제적 통합을 통한 기능적 접근에 치중하는 경향이다. 중국 논자들 다수는 공동체 형성을 전제로 그 실현 방법과 경로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여, 경제 통합뿐만 아니라 다자 안보기구를 동시에 구축하여 다양한 다자간 기구를 통합하는 형태로 동아시아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양국의 논의들을 볼 때, 이제까지 경제적 통합을 기초로 공동체 형성을 추진한다는 데에 어느 정도 일치된 견해를 가지나, 다자간 안보기구를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특히 중국 논자들 가운데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향후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에서 각국이 고려해야 하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동아시아공동체를 향한 노력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다자간기구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중국과 일본의 경쟁으로 가속화되었다. 중국은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일본은 수세적 입장을 취하는 듯하다. 이는 기존의 동아시아 질서의 개편을 추구하는 중국과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일본과의 경쟁의 결과라고 본다. 이러한 양국간 경쟁 속에서 한편으로 ASEAN 국가들은 ASEAN의 응집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즉, '10+3'가 아니라 'ASEAN+3'를 만듦으로써 ASEAN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것이다. ASEAN 국가들은 2003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ASEAN 정상회의에서 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ASEAN 공동체를 구축한다고 결정하였고, 2007년 1월 세부에서 개최된 제12차 ASEAN 정상회의에서는 당초보다 5년 앞당겨 2015년

까지 이를 구축하기로 결의하였다.

2005년 12월 제1차 동아시아정상회의 이후 이 회의가 동아시아공동체로 향하는 길목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하여는 상반된 견해가 병존하나 공동체 형성에 대한 회의론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이 회의에서 참여국이 비동아시아 국가에까지 확대되었고, 중국이 향후 러시아, 미국, EU와의 협력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동아시아정상회의는 현재로서는 단지 대화의 장으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할 것이라 전망된다. 동시에 일본은 ASEAN+6를 포괄하는 FTA를 추진하고 미국은 APEC을 확대, 강화하여 지리적으로 한정되는 동아시아를 탈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통합을 위한 기구 간 경쟁이 계속될 것이며, 단일한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은 당분간 실현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구성주의에 기반하여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구축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제동이 걸렸다고 하겠다. 일본은 중국의 공세를 일단 저지하였지만 거스를 수 없는 지역화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여 능동적으로 이에 대처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주제어: 동아시아공동체, 동아시아정상회의, 지역통합, 일본, 중국, ASEAN

참고문헌

- 김기석. 2005.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일본 대외경제정책의 딜레마.” 『국가전략』. 11:4.
- 김기석. 2007.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주의전략: ASEAN+3, EAS 그리

- 고 동아시아 공동체.” 『국가전략』. 13:1.
- 김재철. 2003.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 『국가전략』. 9:4.
- 김호섭. 2006.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정책: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n Community)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브리프』. 1:4.
- 다니구치 마코토. 김종걸 · 김문정 역. 2007. 『동아시아 공동체』. 서울: 울력.
- 박사명. 2006. 『동아시아의 새로운 모색』. 서울: 이매진.
- 배궁찬. 2005. “동아시아 공동체의 발전과정: ASEAN+3 협력체제를 중심으로.” 이승철 외(2005).
- 이승철 외. 2005.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과 전망』.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최영중. 2005.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이론적 검토.” 이승철 외 (2005).
- Kuik Cheng-Chwee. 2005. "Multilateralism in China's ASEAN Policy: Its Evolution, Characteristics, and Aspiration."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7:1.
- Roy, Denny. 2005. "Southeast Asia and China: Balancing or Bandwagoning?"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7:2.
- Su Hao. 2005. "The Nature of East Asian Regionalism: A Chinese Perspective." Zhang Yunling ed. 2005. *Emerging East Asian Regionalism: Trend and Response*. Beijing: World Affairs Press.
- Yeo Lay Hwee. 2006. "Japan, ASEAN, and the Construction of an East Asian Community."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8:2.
- Zhang Xiaoming. 2006. "The Rise of China and Community Building in East Asia." Margaret McCown et.al.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Seoul: KINU.
- Zhang Yunling. 2005. "Emerging New East Asian Regionalism." *Asia-Pacific*

Review. 12:1.

- 加藤朗. 2006. “安全保障からみた東アジア共同體の可能性.” 東海大學平和戰略國際研究所 編(2006).
- 榎彰. 2006. “東アジア独自の政治的統合を.” 東海大學平和戰略國際研究所 編(2006).
- 江橋崇. 2006. “『域内不戰』の共同體を-東アジア市民連帶の法文化形成.” 東海大學平和戰略國際研究所 編(2006).
- 谷口誠. 2004. 『東アジア共同體-經濟統合のゆくえと日本』. 東京: 岩波書店.
- 谷口誠. 2006. “危機的アジア外交をいかに立て直すか.” 『中央公論』. 2006年 4月.
- 國分良成 編. 2006. 『世界のなかの東アジア』. 東京: 慶應義塾大學東アジア研究所.
- 菊池努. 2005. “『地域』を摸索するアジア.” 『國際問題』. No.538(2005年 1月).
- 吉野文雄. 2005. “東アジア共同體: その意義と課題.” 『海外事情』. 2005年 4月.
- 吉野文雄. 2006. 『東アジア共同體は本当に必要なのか』. 東京: 北星堂.
- 金熙德. 2006a. “東アジアの地域經濟協力と中國の戰略.” 西口清勝・夏剛 編(2006).
- 金熙德. 2006b. “『六カ國協議ワク組み』とASEANとの連携可能性.” 東海大學平和戰略國際研究所 編(2006).
- 渡辺利夫. 2005. “幻想を吹きとばす反日地政學.” 『中央公論』. 2005年 6月.
- 渡辺利夫. 2006a. “『東アジア共同體』の危うさ.” 竹内 宏・村松岐夫・渡辺利夫 編. 2006. 『徹底檢證 東アジア』. 東京: 勁草書房.
- 渡辺利夫. 2006b. “『パクス・シニカ』にアジアが屈する日.” 『中央公

- 論』. 2006年 2月.
- 渡邊昭夫. 2004. “アジアをめぐる日本と中國の外交ゲーム.” 『中央公論』. 2004年 3月.
- 東海大學平和戰略國際研究所 編. 2006. 『東アジアに「共同體」はできるか』. 東京: 社會評論社.
- 瀧田賢治 編. 2006. 『東アジア共同體への道』. 東京: 中央大學出版部.
- 瀧田賢治. 2006. “東アジア共同體構想の背景と課題.” 瀧田賢治 編 (2006).
- 毛里和子. 2005. “『東アジア共同體』と中國の地域外交” 山本武彦 編. 『地域主義の國際比較 - アジア太平洋・ヨーロッパ・西半球を中心に』. 東京: 早稻田大學出版部.
- 毛里和子. 2006. “東アジア共同體と中國.” 『國際問題』. No.551(2006年 5月).
- 白石隆. 2006. “東アジア共同體の構築は可能か-日米同盟との兩立を探る.” 『中央公論』. 2006年 1月.
- 寺田貴. 2005. “『共に歩み共に進む』眞の地域主義の設立を.” 『外交フォーラム』. 2005年 10月.
- 西口清勝. 2006. “東アジア共同體の構築と日本の戰略.” 西口清勝・夏剛 編(2006).
- 西口清勝・夏剛 編. 2006. 『東アジア共同體の構築』. 東京: ミナルヴァ書房.
- 西宮伸一. 2006. “日本外交から見た東アジア.” 國分良成 編(2006).
- 小原雅博. 2005. 『東アジア共同體-強大化する中國と日本の戰略』. 東京: 日本經濟評論社.
- 小原雅博. 2007. “東アジア共同體論議にどう關わるか.” 『外交フォーラム』. 2007年 2月.
- 松本はる香. 2005. “『東アジア共同體』構想の行方と中國外交.” 『ア

- ジ研ワールドトレンド』. No.123(2005年 12月).
- 王毅. 2005. “アジア地域協力と中日關係.” 『國際問題』. No.540(2005年 3月).
- 栗山尙一. 2006. “和解-日本外交の課題<上>, <下>.” 『外交フォーラム』. 2006年 2月, 3月.
- 伊藤憲一・田中明彦・青木保・浦田秀次郎・白井早由里・福島安紀子・神保謙. 2005. 『東アジア共同體と日本の針路』. 東京: NHK出版.
- 田中均. 2005. “21世紀日本外交の戰略的課題.” 『外交フォーラム』. 2005年 10月.
- 田中明彦. 2003. “『東アジア』という新地域形成の試み - ASEAN+3の展開.” 東洋文化研究所 編. 『アジア學の將來像』. 東京大學出版會.
- 佐藤考一. 2006a. “東アジア共同體構想と日本.” 『アジア研究』. 第52卷 3號(2006. 7).
- 佐藤考一. 2006b. “東アジア首腦會談をめぐる國際關係.” 『海外事情』. 第54卷 4號(2006. 4).
- 佐藤考一. 2007. “中國の對ASEAN關係とアメリカ.” 『國際問題』. No.559(2007年 3月).
- 佐藤東洋士・李恩民 編. 2006. 『東アジア共同體の可能性-日中關係の再檢討-』. 東京: 御茶の水書房.
- 佐佐木寛 編. 2006. 『東アジア<共生>の條件』. 横兵: 世織書房.
- 佐佐木毅 編. 2003. 『東アジアにおける公共知の創出』.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中逵啓示 編. 2006. 『東アジア共同體という幻想』. 京都: ナカニシヤ出版.
- 進藤榮一. 2007. 『東アジア共同體をどうつくるか』. 東京: 筑摩書房.
- 進藤榮一・平川均 編. 2006. 『東アジア共同體を設計する』. 東京: 日

本經濟評論社.

- 天兒慧. 2006. 『中國・アジア・日本-大國化する「巨龍」は威脅か』. 東京: 筑摩書房.
- 添谷芳秀. 2006. “東アジア共同體の可能性-日本外交の視點から.” 國分良成 編(2006).
- 青木保. 2005a. “共同體意識の醸成を目指して.” 『外交フォーラム』. 2005年 10月.
- 青木保. 2005b. “東アジア共同體の文化的基盤” 『國際問題』. 2005年 1月.
- 青木直人. 2005. “「東アジア共同體構想」という悪夢.” 『諸君』. 2005年 2月.
- 夏剛. 2006. “「東アジア共同體」構築の隘路と進路.” 西口清勝・夏剛 編(2006).
- はたけ山 襄. 2005. “東アジア共同體の幻想を捨てよ.” 『中央公論』. 2005年 9月.
- 黒柳米司 編. 2005. 『アジア地域秩序とASEANの挑戦』. 東京: 明石書店.
- 黒柳米司. 2006. “東アジア共同體とASEAN.” 『國際問題』. 2006年 5月.
- 谷源洋. 2006. “亞洲發展與區域合作的互動.” 『亞太研究論叢』. 第三輯.
- 金燦榮 主編. 2006. 『多邊主義與東亞合作』. 北京: 當代世界出版社.
- 唐世平・張蘊嶺. 2004. “中國的地區戰略.” 『世界經濟與政治』. 2004年 第6期.
- 門洪華. 2001. “國際機制與中國的戰略選擇.” 『中國社會科學』. 2001年 第2期.
- 門洪華. 2004. “中國和平崛起的國際戰略框架.” 『世界經濟與政治』. 2004年 第6期.
- 門洪華. 2005. 『構建中國大戰略的框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龐中英. 2001. “中國的亞洲戰略-靈活的多邊主義.” 『世界經濟與政治』. 2001年 第10期.
- 龐中英. 2003. “地區化, 地區性與地區主義-論東亞地區主義.” 『世界經

- 濟與政治』. 2003年 第11期.
- 北京外國問題研究會 編. 2006. 『亞洲區域合作路線圖』. 北京: 時事出版社.
- 閻學通·周方銀 編. 2004. 『東亞安全合作』.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王正毅. 2003. “亞洲區域化: 從理性主義走向社會建構主義.” 『世界經濟與政治』. 2003年 第5期.
- 牛海彬. 2005. “東亞地區主義的建構主義解讀.” 『現代國際關係』. 2005年 第12期.
- 劉江永, 閻學通. “關於建立東亞安全共同體的戰略設想.” 『複印報刊·國際政治』. 2004年 第7期.
- 劉昌黎. 2007. “東亞共同體問題初探.” 『國際問題研究』. 2007年 第2期.
- 劉興華. 2004. “地區認同與東亞地區主義.” 『現代國際關係』. 2004年 第5期.
- 張蘊嶺. 2006. “新東亞區域主義的興起.” 『亞太研究論叢』. 第三輯.
- 鄭先武. 2004. “安全共同體理論和東盟的實踐.” 『世界經濟與政治』. 2004年 第5期.
- 鄭先武. 2007. ““東亞共同體”願景的虛幻性析論.” 『現代國際關係』. 2007年 第4期.
- 肖歡容. 2003. “中國的大國責任與地區主義戰略.” 『世界經濟與政治』. 2003年 第1期.
- 馮昭奎. 2004. “『東亞共同體』-要過十道坎兒.” 『世界知識』. 2004年 第10期.
- 現代國際關係研究所東盟課題組. 2004. “中國對東盟政策研究報告.” 『現代國際關係』. 2002年 第10期.
- 胡鞍鋼·門洪華 主編. 2005. 『中國:東亞一體化新戰略』.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인터뷰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서남아팀장, 전화 인터뷰, 2007. 6. 19.

황인원, 경상대학교 정치행정학부 교수, 전화 인터뷰, 2007. 6. 11.

Abstract

Japanese and Chinese Views on the East Asian Community

LEE Han Woo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Sogang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plore and analyze various Japanese and Chinese views on the East Asian Community and regional integration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When the first East Asia Summit was held in Kuala Lumpur on December 2005, someone viewed it a big step to a community building in East Asia, while someone understood it a clearing bubbles. On the way to the Summit it was accelerated by the competition between Japan and China to get an initiative in the community building in the region.

There have been various perspectives on the regional community building in Japan, spanning from positive ones to negative ones, while almost unanimous views have existed in China. On the community building, Japanese have been on the realist or liberal views, while Chinese tend to be based on the social constructivism as well as realism, as China is offensive to change the status quo and Japan is defensive to keep it in East Asia.

To build the community, almost Japanese tend to focus on the functional approach through economic integration into a community, while many Chinese argue to build the integral economic entity and multilateral security institution simultaneously and then integrate them into one regional community. In

Japanese and Chinese views, the nature of the East Asian Community is still formalizing rather than embodied.

Key words: East Asian Community, East Asia Summit, regional integration, Japan, China, ASEAN